

■ 일본 경제산업성, 친환경 제품 조달 기업 우대 제도 마련

- 경제산업성은 제도시 CO₂ 배출량을 절감한 친환경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.¹⁾
 - 일본 정부는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(Green Transformation)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,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자국 내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할 것임.
 - 경제산업성은 친환경 제품 조달을 해당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제시하거나 지원금 심사 등에서 가점 대상으로 할 방침임. 2024년에 탈탄소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GX리그에서 친환경 제품 대상을 결정하고 2025년부터 제도를 실시할 것임.
 -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로로 만든 철 및 재생항공연료(SAF), 전기자동차(EV), 저탄소 화학제품, 웨어러블 태양전지 등을 고려하고 있음.
 - 또한,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친환경 제품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조달기준 및 실질적으로 조달한 제품을 GX리그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촉구할 것임. 향후 친환경 제품 조달 실시 방침을 밝힌 기업만 정부의 탈탄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것임.
- 경제산업성은 2025년에 친환경 제품을 보급 확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, 화학, 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를 설립하여 논의 중임.
 - 주요 논의 주제는 ①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방법 표준화, ②친환경 제품 인증제도, ③친환경 제품 보조금 등 구입 촉진책, ④해외 제도와의 연동 등임.
 - 현재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일본 내와 해외에서의 통일된 산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. 경제산업성은 감축량 산정방법을 표준화하여 기업들이 환경가치를 평가하기 용이하도록 할 것임.
 -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여부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인증제도도 검토할 것이며, 일정 요건을 만족한 제품에 환경가치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안이 제시되었음.
 -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. 이에 친환경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 하는 등 구입 촉진책을 실시할 것임. 현재 일본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 제품을 공공구매시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.
 - 영국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,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)와 연계할 방침임.

1) 日本經濟新聞, 2024.6.29.